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비교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구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미세먼지 대책 순서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봄철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 가동 전면중단 2.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3. 당장 할수 있는 조치부터 놓치지 않겠습니다. 4.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 추진 5. 친환경차 보급 확대 6.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2.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3.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동참 요구 4.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 5. IOT 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로 정확한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6.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2. 호흡기 취약계층, 야외활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3. 차량운행제한 및 친환경차 확대 4.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철회 및 재생가능 에너지전환 5.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미세먼지 해결 6. 미세먼지 기준 및 대응체계 강화
법·제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 -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개 시스템 전면 개편 - 인공지능·미세먼지 발생 플랫폼 기반, Big data 클라우드시스템을 통한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 ◎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 (risk group;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 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상 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 -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 실시 - 현장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 노후 교사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노후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현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추진 - 국가재난수준의 일원화된 관리 및 관련 예산 배정 등의 지원을 통한 피해자지원 및 대응 시스템 및 미세먼지 관련 확실한 국가사업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u>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u> - '인구센서스'조사와 같이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합미세먼지 배출원 정밀현황조사 ◎ IoT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로 정확한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전국 전역에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되, 초·중·고교* 및 유치원, 마을회관 등에 설치 (전국 11,500여 개소) - 국가측정망 측정 자료와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1km×1km 단위 우리동네 미세먼지 예보시 실시(측정자료 실시간 공개) ◎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킥스타터를 통해 네덜란드 단 로세하르데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도로건설등 교통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미세먼지저감정책,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으로 전환 -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 도입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 혼잡통행료 제도 현실화 및 확대 적용 - 대형 백화점·마트, 고층빌딩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미세먼지 기준강화 및 측정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 발전설비 배출허용기준을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미세먼지 측정설비 의무화 - 전국적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노후측정기, 측정높이 등) - 장거리 이동 물질 측정 시설 및 대기확산 모델 연구 ◎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 및 위해성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도시, 농촌, 공단 등), 취약계층 반영한 상세 예보시스템 도입. -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제한 (차량 2부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 일일 공지 - 미세먼지 특보시 어린이 보호조치의 강제력 강화 <li style="padding-left: 20px;">: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의 강제력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 (현행 학교장 재량, 권고사항) ②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응교육, 서비스 제공 <li style="padding-left: 20px;">- 노인복지·요양시설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 특보 대응시스템 및 특별 교육 마련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p>◎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총량관리 규제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 인력 확대 ○ 총량관리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p>공기정화탑 '스모그 프리타워'</p> <p>※ 현재 베이징 가동 중이며, 높이 7미터의 해당 탑은 이온화 작업을 통해 주변 3만㎡ 지역의 공기를 정화함.</p> <p>스모그 프리타워 미설치 지역 대비 약 60%정도 정화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 이용 공간 중 미세먼지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형 공기청정 타워 시범설치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적용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 강화 및 발표주기 세분화 등 재난 수준의 비상행동계획 수립 - 건강영향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 고도화 <p>◎ 호흡기 취약계층, 야외활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p> <p>1) 보육· 학교·병원·요양원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계획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교육기관·요양기관 등 관계자 안전 교육프로그램에 미세먼지 포함 - 보육· 교육기관·요양기관 등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및 신규건설 건물 환기 시스템 의무화 -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건설' 확대 - 화력발전, 자동차, 공단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및 건강영향평가 의무화 <p>2)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농촌 등 지역별 대책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단지 대기 및 환경개선 특별법 및 산업단지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산업·농공단지내 시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 농촌지역 재활용 효율화 지원예산확대 및 불법소각 단속강화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p>3) 야외 활동 국민 미세먼지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노동자·농민· 야외 소상공인, 지하생활자, 지하상가 등 미세먼지제공 강화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경찰·군인 외부 활동 대응 매뉴얼 (확인요망)
에너지 분야 대책	<p>◎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봄철 전력소비 비수기(4, 5월)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전면 가동 중단 ②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③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④ 건설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을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 ⑤ 신규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 의무화 	<p>◎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p> <p>: 당진 1, 2호기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및 미착공 4기(당진 1, 2호기 / 삼척 1, 2호기)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예정이었던 석탄발전(20기) 중 미착공 4기 (당진에코 1.2, 삼척화력 1.2호기) 허가 보류 -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변경 추진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11월-4월)에 화력발전소 가동률 	<p>◎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철회 및 재생가능에너지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가 자주발생하는 2~5월중 발전원(석탄, 가스, 유류화력)별 우선순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따라 가스, 석탄순으로 전환하고 유류화력 가동 중지. - 참고: 발전비용 10% 증가, 대기오염배출량 약 37%감소 (국회예산정책처)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전환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원자력, 석탄화력 진흥에서 재생에너지활성화로 전환

	⑥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	조정(100%→70%)	
수송 분야 대책	<p>◎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 노선버스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 내 CNG로 전면 교체 추진 ○ <u>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등의 경우,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u> <p>◎ 친환경차 보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의 신규 구매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 ○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 공용주차시설 요금 등에 대한 친환경차량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 확대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실시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두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p>◎ 차량 운행제한 및 친환경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경유차 차량 조기폐차, 중소형 경유차 및 건설장비, 농기계등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예산 확대. - 경유택시도입 등 클린디젤 정책 폐기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 자동차배출오염 기준 및 수시검사 강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LEZ) 확대 및 기준강화 - 대중교통전용지구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공공기관 친환경차 사용 의무화 및 전기자동차충전소 확대 - 참고 : 정부의 친환경차보급, 전기자동차충전소 확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음. 우선순위가 낮으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국제 외교	<p>◎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주요 의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 - 현재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은 장관급 회담 수준으로 진행 ○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 및 미세먼지의 월경 저감을 위한 	<p>◎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동참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피해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국제적 협력 추진을 위해 UN(UNEP)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로 채택 추진 - UNEP, OECD, WHO, NASA 등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기여율 공동연구 실시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착수 	<p>◎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미세먼지 해결</p> <p>1)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동아시아 산성 침적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등 국가간 공식 활동을 '동아시아환경협력 사무국'으로 통합·확대운영 - 다자간, 양자간 운영 등 다양한 협의방식 구축 - 주요의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대응, 사막화방지과 산림복원, 연안오염방지 등

	<p>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추진</p> <p>- 다자간·양자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간 경험교류 2) 미세먼지 단기적 과제 - 대기오염에 관한 한중일 정책대화 및 실무그룹에서 미세먼지 중심으로 하는 연구진행하여 국가 간 협력방안 도출 - '대기분야 협력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단'에 과학자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문가, 정책결정자 참여시켜 '미세먼지 협력과제 구체화' - 온실가스저감, 미세먼지저감, 사막화방지 등을 위한 도시간 경험공유 3)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한중일 동반 편익을 위한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체결 : 발생원 조사 및 저감방안마련, 오염자부담의 원칙수립,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등을 포함 - 참고: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일본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기술지원, 한국 기술지원, 북한 수혜국 - 동아시아 탄소시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 동아시아 사막화 방지, 건조지 복원, 국제 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사막화 및 황사방지 협정」 체결 * 참고 : 심상정후보 탈핵공약 발표하면서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구상'을 발표함.
--	--	--	---

※ 비고 : 후보자2인이상 정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의 경우 밑줄 , 후보자별 특색 있는 정책 **붉은색**